尹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이목 집중

10%대 지지율 위기감 고조…참모진 회의 거쳐 결정
'명태균 논란'·'김건희 특검'·인적 개편 입장 밝힐 듯
野 "특검 수용 여부 관건" 與 "국민 눈높이 맞아야"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담화 형식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다자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대국민 소통 형식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입장 표명을 미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4대 개혁 등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 점검을 비롯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권 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국정 쇄신 방안을 고심해 왔고 이날 오후 참모진과 회의를 거쳐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금주 대국민 소통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급박하게 전개된 정국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야당이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면 후반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밝힐 국정 쇄신 해법이다.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와 압박에 어느 수위까지 응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일단 회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 내용을 토대로 야당이 제기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명씨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실 것"이라며 "회견의 성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발언하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임기단축 개헌' 띄우기…與 "이재명 판결 전 선동"

민주 "尹임기 단축 부칙개정" 주장…진보당 '퇴진총궐기' 집회
與 "野 탄핵·개헌론은 정치 공세…어떤 헌정 중단도 막을 것"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준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헌법 부칙을 우선 개정해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며 "조기 퇴진을 이뤄낸 이후 4년 중임제 도입 등 전반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해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갈리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여당은 탄핵 주장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며 "어떤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이 막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장외 집회까지 열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방어막을 친 것으로 해석됐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 사안은 헌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법조문의 문리해석을 한 축으로, 입법 취지와 헌법정신을 다른 축으로 할 때 헌법 해석론의 문제가 대두된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해당 규정의 반대 해석상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

여·야, 국가 예산 토론회서 격돌

與 "건전재정 지켜" vs 野 "자멸적 긴축재정"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놓고 격돌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되 관행적·비효율적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덕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의원은 올해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저출생 정책에 있어서도 단순 현금 지급성 지원을 넘어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 다시 세수가 결손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표도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무시하는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지방의회 경진…해남 '저연차공무원 지원조례'도

광주시의회와 해남군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강원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 사례 9건을 발표했다. 주요 의정활동 우수 사례로는 광주시의회가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를 찾는 '오픈런'을 해소하고자 지역병원, 전문가와 합심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설립한 일이 우수 의정활동 사례로 꼽혔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해남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진수 기자